

■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변경

# 무사고 8년돼야 최고 60% 할인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5년 뒤에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해야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최고 할인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1년씩 최장 1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무사고 운전 기간별 보험료

**현행 7년서 1년 더 늘리기로...내년 1월 시행**

**5년후엔 더 강화, 12년 이상 무사고라야 혜택**

할인율이 ▲1년 10% ▲2년 20% ▲3년 30% ▲4년 40% ▲5년 50% ▲6년 55% ▲7년 이상 60%이다.

그러나 내년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8년 이상 무사고 운전 해야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된다. 대체로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좋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와 1~3년 무사고 운전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이 더 높아지고 손해율이 나쁜 4~7년 무

사고 운전자는 할인이 낮아진다.

무사고 운전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 부담이 작아지고 길면 커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60% 할인이 유지되고 이후에 부상 13~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기본 보험료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손해율이 나쁜 장기 무사고 운전자

의 전체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보험료 최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내년에는 일단 8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그 기간을 해마다 1년씩 최장 12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생각이지만 고객 확보 경쟁 때문에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고 할인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이처 늘리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을 위한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보험사별 보험료 격차 더 커질 듯

앞으로 보험사들의 보험료 격차가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현대해상 강당에서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보험가격 산출 체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협회가 7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 때 미래의 투자수익률과 보험금 지급 규모, 판매 경쟁력, 계약 유지율 등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한 변수를 추정해 장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손·생보험협회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2007~2008년 시범 또는 부분 시행을 거쳐 2009년 모든 보험 상품에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국기업, 日 진출 성공 비결?

### 진로·두산·농심·LG전자... 한류 접목 현지·고급화로 승부

일본 진출에 성공한 한국기업들의 비결은 현지화, 고급화, '한류' 접목, 적절한 유통망 공략,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이 꼽혔다.

7일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가 작성한 '일본진출 기업의 성공사례'에 따르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중 현지에서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온라인 게임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는 일본에 진출해 성공한 한국 기업으로 진로제팬, 두산제팬, 농심제팬, 안랩제팬, LG전자제팬, 아이리버제팬, NHN제팬 등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주류유통은 총판,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로 이어지며 리베이트제, 반물제 등,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등이 복잡한 외국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로는 적정이익을 보장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 한 특약점 체제를 운영해 영업이익률을 제고했으며 현지인의 미각에 맞는 수출용 소주를 별도 제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심은 일본내 주요 한류행사에 식스콘너 설치, 이동 트럭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신라면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연합뉴스

## 무선인터넷 + 음성 화상통화 서비스 동시 가능 삼성 '와이프로 복합단말기' 첫 선

삼성전자가 와이프로(휴대인터넷)와 음성·화상통화가 동시에 가능한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의 첨단 디지털 기기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와이프로 확산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7일 각종 통신사업자와 시장조사기관 등 I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와이맥스 서밋 2006'에서 와이프로 복합 단말기 '디럭스 엠아이티에스(Deluxe MITs-SPH-P9000)'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전세계 와이프로 관련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장악, 해외시장 진출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기반으로 진화한 디럭스 엠아이티에스는 와이프로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 일체형 모바일 단말기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음성 통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와이프로는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통신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디럭스 엠아이티에스는 와이프로, CDMA 1x EV-DO를 통해 인터넷 및 무선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음성통화 및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모바일 와이맥스 서밋 2006' 행사에서 도우미들이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와이프로 복합 단말기 '디럭스 엠아이티에스(Deluxe MITs)'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세계 명품 브랜드 만든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일 매년 국내 최고의 기술로 선정되는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세계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세계의 신기술로 발돋움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1999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중에서 기술·경제적으로 탁월한 파급효과를 보인 제품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10대 신기술의 세계 명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기술분야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세계기술대상(WTA) 수상에 필요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해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중 낸드플래시, 타임머신 D-TV, 단백질 의약품 등 3개 기술이 3일 미국에서 열린 2006 세계기술대상 최종 본선에 진출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일반·전문건설 겸업제한 없앤다

내년부터 업역선택 자율

오는 2008년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고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불허였던 시공참여 자제도가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하수급인 보호,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 하도급 관계 공정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

##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가 분양가 상승 요인” 재계 “현실외면 기업규제 철폐” 요구

### 주택·건설등 120건 규제개혁위에 제출

연간 1천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가구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유세 때문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 문제를 포함해 8개 분야 12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세제 16건, 관광 13건, 공업·에너지 9건, 유통·물류 7건, 환경 4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유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중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건설 산업과 관련해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

###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주요내용

부문	주요 규제개혁과제
공공임대(9건)	대형세탁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서비스업 입주제한 때문에 불허상태) -개발완료로 복지 보전의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성정관리지역에서 BT업종의 공중시설 허용
주택·건설(36건)	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 완화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중복처벌 개선
금융·세제(16건)	경영권 위함과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 폐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대기업(16건)	대규모 상장회사 (시가총액 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한해 지분율 요건 완화(30%→20%)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노동·안전(19건)	장애인의 무고용인원 산출시 해상직 근로자 제외 -선박의 분선용 시디리스 통로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제외
유통·물류(7건)	자동차반용 트레일러의 길이·너비 제한을 특례기준으로 완화 -대형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관광(13건)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호텔 셔틀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허용
환경(4건)	품목별 폐기물의 분리보관제도 개선 -환경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변경

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경제계는 요청했다.

경제계는 또 “자동차 생산이 다품종, 대형화 추세이나 자동차안방용 트레일러 적용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자동차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안방용 트레일러의 길이·너비 제한을 특례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상순응업체의 경우 해운환경의 특 수성과 선원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원인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에는 해상직 근로자가 포함됨으로 인해 업계는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제계는 말했다.

경제계는 호텔, 병원, 사우나 등에서 대량의 세탁물이 발생함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대형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대규모로 개발돼 복지 보전의 실익이 없는 지역 소재 공장인 경우, 개별 검토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경영권 위함과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 폐지 ▲성정관리지역에서 생명기술(BT)업종의 공장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 다이옥신 배출기준, 더 까다롭게 철강·시멘트 등 산업시설 허용치 제한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렌, PCBs(폴리염화페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 /연합뉴스

##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검토”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경부 차관 제1차관은 7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에 출연,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 감지센서·카메라로 도둑 잡는다 에스원, 영상관제 시스템 개발

보안경비업체 에스원(대표 이우희)은 무인경비시스템과 화상감시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영상관제 시스템'을 개발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에스원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영상관제 시스템'은 감지센서와 카메라를 연계 운영해 경비구역내 침입 등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화면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해 줌으로써 정확한 상황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

기존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감지센서의 이상 신호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요인출동 등의 문제가 많았다. /연합뉴스